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23

2023.11.1.~2023.11.30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(11.14)

- 중견기업법 상시화(10.19 시행)를 기념하며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,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'중견기업 정책 10년, 성과와 과제'를 주제로 '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' 개최
-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

□ 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세미나 (11.16)

- 2023년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산업부와 공동으로 '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세미나' 개최
- 고영테크놀로지, 한세실업, DRB동일 등 우수 ESG 실천 중견기업의 사례 발표, 세계 ESG 동향 및 대응 전략 주제 강연, 1:1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ESG 전략을 모색

□ 수출 중견기업 간담회 (11.22)

- 반도체, 의약품, 금속, 기계 등 업종별 수출 우수 중견기업을 초청해 '수출 중견기업 간담회'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논의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지방시대위원회]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-2027) (11.1)

- '지방분권', '교육개혁', '혁신성장', '특화발전', '생활복지' 5대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지방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(11.1)

-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'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'을 발표하고, 기존 SOC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해 ▲지방의 경쟁력 있는 '디지털 생태계' 성장 지원, ▲지자체 주도 '지방최적화 디지털 프로젝트' 구상, ▲'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 체계 확립' 등 중점 추진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(11.7)

- 경제·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AI, 데이터, 6G, 차세대보안, 양자, 디지털 콘텐츠 등 12개 핵심 디지털 혁신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방안을 총망라한 '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' 발표

□ [기획재정부]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(11.8)

- 경제단체, 업종별 협회 등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건의 과제를 토대로 ①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, ②행정절차 지연, ③발주처-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단기 수출확대 전략 (11.8)

-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, 마케팅, 인증 등 3대 애로 분야 중심 단기 수출 지원 대책 마련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K-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(11.15)

-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% 이상 달성을 목표로 ①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, ②제조 시스템 고도화, ③법·제도 기반 정비 등 3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, 2028년까지 7,1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

□ [기획재정부]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(11.15)

-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,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·로봇, AI, 바이오·헬스, 마이데이터,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핵심과제 추진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윤석열정부 R&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&D 추진전략 (11.27)

-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, 투자,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방안을 담은 'R&D 혁신방안' 및 '글로벌 R&D 추진전략' 발표
 - * R&D 혁신방안: 도전적·혁신적 연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, 및 성공·실패 평가등급 폐지, 연구시설·장비 조달 기간 단축(120일→50일) 등 추진
 - * 글로벌 R&D 전략: 향후 3년 간 글로벌 R&D투자 5.4조원 이상 확대, 국가전략 및 탄소중립 기술분야 글로벌 R&D 전략지도 수립, 주요 분야별 R&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·추진 등 실행

□ [기획재정부]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(11.27)

- 바이오·헬스케어, 무탄소에너지·환경, 모빌리티·로봇,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현장규제 20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,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추진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기획재정부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11.8)

-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('24.12.31까지), ②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추가(머시닝센터 등 3개 품목), ③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(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드 등) 등 추진

□ [고용노동부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(노란봉투법) 국회 본회의 통과 (11.9)

-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'노란봉투법'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

□ [금융감독원]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(11.14)

-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 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, 주요 용어·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,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인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산업 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 등 마련(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)

□ [고용노동부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(11.14)

- 낡은 산업안전기준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▲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, ▲데크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의 안전기준 명확화, ▲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 삭제 등 추진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를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(11.17)

-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상 ▲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위탁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'사건절차규칙' 및 ▲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동의를결 이행점검 및 개시 결정에 대한 절차를 보완한 '동의를결규칙' 개정안 마련

□ [관세청]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(11.22)

-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가격추이·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 적용 예정

2 국회

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혜숙의원, 11.1)

-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(3.1%)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하는 '부담기초액'의 범위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,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해 가산하도록 함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, 11.9)

-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,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

□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·사회·거버넌스 기본법안 (조해진의원, 11.9)

- ESG 입법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·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, 중앙부처·지자체별로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등 추진

□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, 11.10)

-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이 대부분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는 현실을 고려해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, 정부가 지정·관리하는 산업기술·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, 11.9)
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'24.12.31.까지 연장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, 11.13)**

-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및 중소·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'26.12.31' 까지 연장하고,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'25.12.31'까지 연장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재형의원, 11.13)**

-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그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,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 이연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, 11.16)**

-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시설 설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

□ **합성생물학 육성법안 (장제원의원, 11.15)**

-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'바이오파운드리' 설치 및 운영,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및 활용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

□ **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, 11.16)**

-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도록 명시

□ **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(구자근의원, 11.16)**

-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 및 저장(Carbon Capture Utilization&Storage, CCUS)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특례, 인증, 전문기업 확인,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금융·세제 등의 지원,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

□ **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, 11.21)**

-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추가 및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,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 거절 시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서면 통지하도록 함

□ **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, 11.21)**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,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

□ **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영희의원, 11.24)**

- 국가 및 지자체가 의약품 비축사업,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제약산업육성·지원 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

□ **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, 11.28)**

- 상속법 개정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'21년 5년에서 10년으로, '22년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확대됨에 따라, 개정법 시행 전 2천억원 미만의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

□ **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, 11.30)**

- 수도권 편중현상 완화를 위해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

지원사업

□ [국가기술표준원] 2024년 제1회 신제품(NEP) 인증 (11.21)

-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,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증 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'24년 제1회 신제품(NEP) 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

□ [환경부] 2023년 9차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(11.29)

-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중소·중견기업의 자발적·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(감축설비 투자비의 50% 이내)

□ [한국지식재산보호원] 2023년 9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(상시)

- 해외 진출(예정) 제품·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·피침해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, 권리행사 전략 지원